

## [ 오피니언 ]

## 데스크시각

김우성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특화된 경쟁력에 있다. 참여정부 시절 균형정책 중 좋은 점은 이어나가겠다. 서울시장을 했으니까 서울만 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조업 대나보내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충주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 지방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충북도 업무보고에서도 “부조건 수도권 규제를 끈다는 계획은 없다. 향후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빛어진 성난 지방민심을 달랬다. 이후 잇단 지방 나들이에서도 ‘선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천명해 왔다.

## 공통 된 ‘서울 공화국’

불과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완전 반판이다. 지난달 19일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그간 지방의 의구심을 불러왔던 정부

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이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신호는 그 이전에도 감지돼왔다. 지난 8월 김문수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완화 거둬 들여라

지사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이라는 등 연일 정부를 비판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불을 지폈다.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경고하는가 싶더니 일부 관료와 여당 의원들이 거들고 나서 마치 ‘싸고 치는 고스트’를 연상케 했다.

정부는 이후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었다. 또 지난달 26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욕을 먹겠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노골화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62~1996년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현상이 극에 달했다. 이에 1970년 인구과밀의 문제를 해결해 마련 등 이른바 ‘서울공화국’ 문제

인력, 교육인프라 등 모든 것을 거칠없이 빼아들여 지방은 결국 빙ル터리로 남게 된다.

## 지방 폐폐는 곧 국가 공멸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그 명분을 말한다. 하지만 지방이 폐허가 된 뒤 ‘서울공화국’ 만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수도권의 과밀화비용은 연 12조원, 환경개선비용도 연 4조원에 이른다. 부동산값 양등으로 고비용 저생산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국제 수준의 도시들과 경쟁이라니 말이 되는가.

정부 발표 이후 지방의 반발은 극심하다. 국토 불균형 문제에 철에 대한 국론 분열까지 보태는 형국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갈등 심화는 물론 같은 여당 내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갈리고 광역단체장 협의회도 사분오열됐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서울의 과밀화와 지방의 소악화를 동시에 촉진, 국가 전체의 공멸을 부를 뿐이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조차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으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겠는가.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각각 47.2%, 56.4%, 45.7%, 60%였다. 그러던 것이 2006년에는 각각 48.5%, 56.6%, 48.1%, 93.8% 등으로 1.3%p(90만 명), 0.2%p(4천400개), 2.4%p(1천300개), 33.8%p나 증가했다. 수도권은 결국 국토의 12%에도 미치지 못한 면적에 48% 인구와 60% 생산기능, 80%를 웃도는 경제·문화·사회적 중추기능이 집중되는 공룡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맥락에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김창균



“맨날” 지기만 하던 백군이 이겨서 좋았겠구나.”

일전에 막내 일기장에 적힌 담임선생님의 말씀이다. 교과 지도에도 바쁜 시간에 매일 댓글을 달아주시는 성정이 고마웠다. 하지만 일기장에 아이가 적은 ‘만날’을 지우고 ‘맨날’이라고 강조하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또, 며칠 전 수업 시간에 심청전의 한 구절 ‘닭아, 닭아, 울지 마라….’를 읽는데 학생들이 웃는다. ‘닭아’를 [닭가]로 읽는 소리가 낯설었던 것이다. 하기야 주위에서 다들 ‘맨날’로 쓰고, [다가]로 읽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혼자서 우리말의 문법을 따진다는 것은 어쩐지 쑥스러운 일이다.

bed처럼 밟을된다네. 제발이지, deed라고는 말하지 말게….”

오죽했으면 영어 표기와 발음의 혼란을 놓고 버나드 쇼(George B. Shaw)가 fish를 ghoti라고 표기하는 게 어찌나고 했을까. rough에서 ‘gh’는 [f]로, women에서 ‘o’는 [i]로, nation에서 ‘ti’는 [tʃ]로 발음되니 그럴 만도 하다.

우리말은 어떤가. 〈꽃(花)〉을 ‘꽃, 꽃으로 쓰지 않는 유연, 〈꽃한 송이〉와 〈꽃을〉을 [꽃한송이]와 [꽃을]로 읽는 데까지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외국어에 들어는 노력의 반에 반한 우리말과 글 사용에 들인다면 우리말을 어렵다고 느낄 이유가 없다.

물론 사회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혼자서 우리말의 문법을 따진다는 것은 어쩐지 쑥스러운 일이다.

## 어려운(?) 우리말 바루기

말과 글이란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먼저인데, 외국에는 없는 어문 규정이 언어생활의 죽어인 듯도 하다.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한글로 막사 표기법 등 끝에 끝에 보이는 규정이 많기도 하다. ‘회계연도, 암퇘지’는 되고 ‘회계년도, 암퇘지’는 왜 안 되는지, ‘슈퍼마켓’을 ‘수퍼마켓’이라고 쓰면 물건이 안 팔릴까. 게다가 ‘강총강총’은 틀리고 ‘강총강총’만 맞는다는 건 지나친 횡포 아닌가.

변화하는 언증(衆衆)과 유리된 폐쇄적 규범이 오히려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런 편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풍자식으로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heard를 조심하게. 무서운 단어라네. beard처럼 생겼지만 bird처럼 소리가 나지. 그리고 dead는 bead가 아니라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최소한 우리말을 잘 몰라서 못 쓰거나 잘못 알아서 틀리게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외국어로 막사 표기법 등 끝에 끝에 보이는 규정이 많기도 하다. ‘회계연도, 암퇘지’는 되고 ‘회계연도, 암퇘지’는 왜 안 되는지, ‘슈퍼마켓’을 ‘수퍼마켓’이라고 쓰면 물건이 안 팔릴까. 게다가 ‘강총강총’은 틀리고 ‘강총강총’만 맞는다는 건 지나친 횡포 아닌가.

변화하는 언증(衆衆)과 유리된 폐쇄적 규범이 오히려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런 편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풍자식으로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광주 북성중 교사·2007년 3월 수상자〉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 수험생 고시장서 기초질서 지켜야

문에 고사장이 망가지고 대학에서는 대여를 껴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학들의 고충이 이해가 됐다. 여기에다가 고사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학원에서 찾아와 각종 전단지와 홍보책자를 나눠보는데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은 아무래나 버리고 가버렸다.

수험생들이 이처럼 기초질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곁탕을 먹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심각해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이 기후변화의 일리우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망하면서 녹색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정부의 역할상 정책으로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든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알아서’ 개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영국 환경부장관은 ‘개인탄소할당’(individual carbon allowance) 제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모든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주, 개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녹색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부문에서는 전환경, 저탄소형 제품의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핵심이다.

이제는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녹색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부문에서는 전환경, 저탄소형 제품의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핵심이다.

〈영신강유역환경청장〉

## 유류할증료 무려 6배차… 항공료 편법인상 아닌가

아이들에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적과 독립군 유적 등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 답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유류할증료 등 여행경비를 따져보니 너무 비쌌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에 소모되는 연료를 보전해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전액 항공사 수익이 된다. 칭다오나 산동반도는 항공권이 왕복 10만 원 이하도 꽤 있었지만 유류할증료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35만 원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 유류할증료의 원칙이 모호하다. 일본의 경우 초단거리로 적용되는 항공료 100달러 정도면 되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낮은 반면, 중국은 동남아와 같이 단거리

적용해 왕복 200달러 가까이 됐다. 즉 일본에 비해 거의 2배 비싼 셈이다.

원칙 없는 유류할증료를 통해 항공사들은 편법적으로 항공료 인상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즉 항공료 요금을 10만원으로 책정한 후 고가의 유류할증료로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행시간이 50분 정도로 비슷한 구간인 인천~제주는 유류할증료가 3만원 정도인데, 인천~칭다오, 인천~파리에는 무려 20만원이 유포된다.

유류할증료가 진정으로 항공사의 기름값 보전이 아니라 편법적인 항공료 인상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최인우·광주 북구 청풍동

## 시 설

## 여수엑스포 관람객 유인대책 서둘러라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찾을 의사가 없다고 한다.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난 7~8월 두 달간 서울과 지방 5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부정적 의견은 53%였다.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4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다(53%)’였지만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9%였다.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84%인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럽다.

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질문에서도 드러난다. 박람회 마스코트인 ‘여수랑 바다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교통편 KTX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18%인 반면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박람회 개막에 맞춰 전시장까지 KTX가 개통되는 상황에서 교통편을 포함한

박람회에 대한 전반적 흥보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3개월동안 여수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 규모를 800만 명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내국인이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외국인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이다. 특히 단의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점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마스터플랜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관광객이 어디에서 오는지 추정하지 않은 채 도로망을 짜고 숙박객 규모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수의모델 제시도 없이 민자 유치를 통해 박람회를 준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비롯 마스터플랜을 재점검해야 한다. 밀그림을 잘모르면 전체 구도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 전방위적 흥보도 중요하다. 정부와 조직위,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암울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시민 모두 즐기는 ‘추억의 총장축제’ 되길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이제 개막됐다. 올해 5회를 맞은 광주 총장축제는 해가 갈수록 내실을 다지며 우리나라 대표적 거리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총장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추억을 즐기고 정답을 나누기 기대한다.

총장축제는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쇠락해가는 총장로와 금남로 등 도심의 상권을 되살리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주제로 드러나듯 1970~80년대 총장로의 추억을 중심 테마로 하고 있다. 일반적 문화예술축제와는 차별화된 거리축제라 할 수 있다.

총장로는 과거 광주의 대표적 명소다. 40~50대 시민 대부분은 1970~80년대 주말과 휴일이면 무작정 거닐고 싶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리로 기억하고 있다. 전성기 시절의 거리를 재현해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과거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 축제의 취지다. 불거리, 즐길거리는 풍성하다. ‘교복 패션쇼’와 ‘총장열차’, ‘콜복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골목길 문화제’ 등은 아련한 추억을 되새겨 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문화프로그램 경연 대회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특히 옛 중앙교회에 마련된 ‘추억의 시간여행 전시관’이 인상적이다. 옛거리와 교실 수업장면, 영화 포스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아이스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볼 수도 있다.

&lt;p